

종합·해설

盧대통령 참평포럼서 무슨말 했나

“대통합·후보단일화 병행해야”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일 참평(참여정부 평가)포럼 초청 특강은 예초 예정시간의 두 배가 넘는 무려 4시간이나 진행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특강의 주제인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에 맞춰 정치·경제·안보·언론 문제 등 거의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필통' 등 특유의 직설 화법을 섞어가면서 격정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소신을 보여줬다.

특히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그 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신랄한 비판의 칼날을 들이쳤다.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에 대해서는 “좋은 정부”라며 호평했다. 다음은 이날 특강의 요지.

“멀쩡한 경제 왜 파탄이나”

▲“경제, 경쟁력 높아지고 있다”=지난 4년 내 내 위기·파탄·실패라는 말로 혼들었다. 증가·지표로 말하자, 올라갈 것 올라가고 내려갈 것 내려가고 있다. 기초체력 강해지고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 참여정부가 계속 간다면 우리 경제를 장담할 수 있다.

참여정부가 어느 정부와 비교해 파탄인가. 6공화국, 문민정부 성장률 높았지만 두 정부가 경제를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재정신 가진 사람 대우하 투자 안 해”=지금 경제를 파탄이라고 7% 성장 공약하는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멀쩡한 사람에게 무슨 주사를 놓을지, 무슨 약을 먹일지 불안하다. 무리한 부양책 써서 경제 위기나 초래하지 않음에 불안하다. 3만불, 4만불 공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한 얘기로 생각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참여정부 평가포럼' 초청 특강에 참석, 회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386 핵심측근인 안희정 포럼 상임집행위원장. /연합뉴스

고 있다. 대우하 민자로 한다고 하는데 제정신 가진 사람이 투자하겠나. 세금 내리는 것 말고 아무런 새로운 전략 없이 참여정부 성과를 파탄이나 실패나 공격하는 것만으로 우리 경제를 세계 일류로 만들 수 없는 건 명백한 진실이다.

윤하·정통성 등 노·박 비판

▲“지도자의 정통성 중요해”=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풀리지 않는 당당한 일원으로 등장한 것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다. 지도자의 정통성이 국가 위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한국의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 이렇듯, 제가 그렇게 말한다 게 아니고 해외 신문에서 그렇게

나면 곤란하다는 얘기가. ▲“언론만 부당한 권리 주장”=민주화 이후 모든 조직과 집단이 관행이란 이름의 부당한 이득을 합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국민의 알권리를 방패로 막강한 권리를 누리면서 왜 부당한 권리를 주장하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언론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대통합과 후보단일화 병행 추진해야”=당을 합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되 이른 시일 내에 통합이 안 되면 후보를 내세워 경쟁하면서 대통합과 후보단일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전략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盧-DJ 연대론’ 재부각

盧 참평포럼서 '참여정부=국민의 정부' 강조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연설을 계기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나뉘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연대론 내지 제휴설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범여권의 주요 대선주자들을 비판하면서도 유독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정책적 근접성을 강조하면서 상당한 친근감과 일체감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민주택 정책은 국민의 정부에서 만들어졌고

우리는 정책집행만 했다”, “국가발전 전략의 전환은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했고, 복지정책의 토대도 국민의 정부에서 형성됐다. 라면, 방북면 사계기도 국민의 정부 이래 없지 않느냐”면서 “국민의 정부는 좋은 정부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똑같다”며 동일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범여권 대통합 문제와 관련, “대통합과 후보단일화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합에 노력하되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이 안되면 후보를 내세워 경쟁하면

서 대통합과 후보단일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이 “대통합을 해서 단일정당을 하거나 이해관계가 달라 잘 안되면 후보단일화, 연합이든 국민 앞에서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줄지 바란다”고 일관되게 주문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범여권 대통합 문제와 관련, “대통합과 후보단일화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합에 노력하되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이 안되면 후보를 내세워 경쟁하면

“盧 선거 중립의무 위반” 노·박, 강력 비판

한나라당 양대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은 3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에서 이·박 두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 강한 어조로 응수했다.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직 대통령이 유력 대통령 예비후보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성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 캠프의 한선교 대변인도 “그들은 지난 4년 동안에도 끼리끼리 모여서 오늘처럼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지냈다. 그들에게 내 덕과 내 탓만 있을 뿐”이라고 힐난했다. /연합뉴스

李·朴 검증 ‘전방위 격돌’

李 “앞서서 당하지만 않겠다” 박 “검증위 활동 본 뒤 공세”

한나라당 경선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양대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가 ‘검증 대격투’에 나설 태세다.

두 주자 측은 후보 검증이 당내 경선 판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 검증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대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론지지를 1위 대선주자로써 지금까지 당 안팎에서 집중적인 검증 공세를 받아온 이 전 시장은 “이제 앞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면서 여차하면 반격에 나서겠다는 전의를 불

태우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정정당당하게 검증을 받되,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도, 요구하지도 않겠다”고 밝혔지만 경선 열기가 달궈지면 어느 정도의 반격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게 캠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통령 직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박 전 대표가 이사장이었던 정수장학회(옛 부일장학회)에 대해 ‘강탈한 재산’이란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전 시장 진영으로서는 호재다. 또 지난 1997년 박 전 대표가 정계에 진출하기 전까지 베일에 가려진 사생활, 최모 목사와의 관계 등도 자연스럽게 도마 위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 전 시장을 겨냥한 검증론에 불을 지폈던 박 전 대표

진영은 “검증은 이제부터”라면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일단 검증위 활동을 지켜본 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경우 적극 공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캠프 차원에서 검증위에 자료를 제출할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캠프 측에서는 당 검증위가 활동에 들어간 만큼 시민단체나 이해 당사자들이 재산형성 문제, 병역면제 논란, 종교적 편향성, 여자 문제 등 이 전 시장에 대한 검증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검증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이 전 시장의 서울시장 취임 때인 2002년 이후 말살수와 각종 논란거리를 집중 조망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윤하 공방’도 격화일로

李측 “더 이상 공격팬 윤리위 회부”

지난달 29일 광주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표적 공약인 ‘한반도 대우하’를 둘러싸고 촉발된 박근혜 전 대표와 이 전 시장간 공방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수비’에 치중하던 이 전 시장이 3일에는 적극 ‘공세’로 전환하며 ‘제2라운드’가 펼쳐진 것. 이 전 시

장의 최측근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 전 대표의 공약들을 우회적으로 거명한 뒤 ‘윤리위 회부’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공세를 펼쳤고, 박 전 대표측은 공개 대응을 자제하면서 오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 의원은 간담회에서 “많은 아름다운 경선을 위해 가고 있는데 내부

에서 아군을 공격해 피아 구분도 안되고 천동번거승이들의 흉산이 되고 있다”며 “특히 서울의 I의원, 대구의 K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출마 불가능한 상황이 될 정도로 비방이 너무 심하다. 당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는 등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지나친 비방자’로 지목된 박 전 대표측 I의원은 “비판한 적 은 있어도 비방한 적은 없다”고 반박하고, “충신 윤운하는 것이야말로 저급한 정치공세다. 공천을 자기들이 주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 박근혜 올림머리 복귀 왜

당 지지층 선호·TV토론회 시청자 잠기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과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로 복귀하고 있다. 정계 이후 언론 고수해오던 모친 고 육영수 여사를 연상시키는 ‘업스타일’에서 지난 1월15일 목위 길까지 층을 낸 짧은 ‘웨이브 단발’로 과감한 변화를 준지 5개월 만에 원래 스타일로 복귀하는 셈.

박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광주 정책토론회에 올림머리로 나타난 이후 지난 1일 제주도 전국보도·편집국장 특강에 이르기까지 일주일간 행사가 머리를 올리고 참석했다. 캠프 안팎에서는 지난번 ‘내림머리’로의 변화가 영부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한층 젊고 활동적인

인상을 심어줘 대선주자로써 강한 인상을 주고 젊은 지지층에게 소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올림머리’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 지지층이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스타일로 다시 변화를 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거 당 대표 스타일로 전환을 통해 ‘당신 잠기’에 나선다는 것이다.

실제로 TV에서 생중계되는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박 전 대표 진영에는 주요 시청자가 수후자고 연령층으로 올림머리 선호자들이 대부분인 만큼 토론회만큼은 올림머리를 해야한다는 주문이 빗발쳤다는 후문이다. /연합뉴스



공시 최고 사 건 2007카공29 신창인 김범일 전 남원군 안동읍 1100 평에 해당되는 1100평 4050평

공시 최고 사 건 2007카공30 신창인 김범일 전 남해군 화원면 산호리 1439

부동산 공매공고 산은캐피탈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매도인”) 소유 부동산(이하, “매각대상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매도인의 자산관리자인 산은캐피탈주식회사(이하, “자산관리자”)는 아래와 같이 매각을 공고합니다.

공 시 최 고 아래가제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7. 9. 6. 10: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공시 최고 사 건 2007카공31 신창인 오명환 전 남해군 계곡면 성진리 83

합병 공고 신원합동조합 제5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합신원합동조합과 무등신원합동조합은 2007년 5월 29일과 6월 1일, 각각 상해 조합원총회에서 병합신원합동조합이 무등신원합동조합을 흡수 합병하여 그 일체의 권리·의무를 인계, 인수하고 아울러 병합신원합동조합은 존속하여 무등신원합동조합은 소멸하게 되었다고,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07년 7월 1일까지 그 뜻을 서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이의가 있을 때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됨을 이고 공고합니다.

매도인의 자산관리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이상덕

고시원매매 ■북구 용봉동 전대상대 5면 ■대지: 100평, 건평: 260평 ■선: 84개(현재 만실로 영업중임) ■월수익: 1,596만원 ■중자: 3명8인민원 ■매가: 9억5천만원 (신수요자와 직거래인원) ☎ 016-435-0428

상업지매매 • 전남신도청 정문앞 (일반상업지 140평2필지) • 숙박시설, 유증업소부지 • 즉시건축가능(신수요자형) 매매상담: 011-330-9365

4층 원룸 매매 ▶조선대 정문 인접4가(대학생 인기종류) ▶대지: 107평 건평 206평(실경231평) ▶층: 상·관·리실 ▶2층~3층: 원룸14개 ▶4층: 주·인·세, 원룸1개 ▶매가: 9억6,700만원(월22만4천3,700원(세포함) 10억의 건물 연금3억3천만원 인수 ▶월세전환시 월600만원(신수요자형(노후보장)) ☎ 062)234-7497 (주인직)

사무실 임대 ▶광천동 광천터미널 맞은편 광주간호학원 3층 ▶고급객 사무실 37평 2칸 (간은 회의실 참고 다용도실 적함) ▶보 4천만원, 월 60만원 ☎ 016-610-1147